

2025학년도 1학기

규장각 세미나

학술 논문 자료집

1. 교과서 속 5·18민주화운동 명칭의 변천과 이를 둘러싼 논쟁 2p
2. 테러리즘과 국가폭력으로 바라본 여순사건 17p
3. 한산·명량대첩에 적용된 전술에 대한 비교·분석..... 27p

교과서 속 5·18민주화운동 명칭의 변천과 이를 둘러싼 논쟁: 올바른 명명 제언

역사교육과 20240383 경나영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II. 교과서 속 5·18민주화운동: 명칭과 서술 내용의 변천	3
1. 초기 교과서 명칭과 서술의 변천	
2. 공식 명칭 확립 이후 교과서 서술의 심화와 안정	
III. 명칭을 둘러싼 주요 논쟁과 그 의미	7
1. '운동'과 '항쟁'	
2. '민중' 용어 사용	
3. '광주' 지역명 포함	
V. 결론	11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및 제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역사교육은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 과정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역사 지식과 역사관을 형성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명칭은 단순한 지시어의 선택이라는 문제를 넘어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정의하고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 대중의 이해와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명칭은 특히 역사 교과서에서 중요하다. 역사 교과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특정한 서술 양식과 관점에 따라 구성되며, 그 내용은 학습자들이 접하는 공식적인 역사로 간주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다.³⁾ 따라서 잘못된 명칭이 지속적으로 교과서에 사용될 경우,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잘못된 사회 인식이 계속돼서 재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의 중요성은 5·18민주화운동(이하 5·18) 명칭의 변천과 현재까지 계속되는 논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으로, 군부 독재에 대항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저항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발생 초기, ‘무장폭동’, ‘광주사태’ 등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며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었다. 이러한 명칭들은 사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시민들의 저항을 불법적인 행위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으며, 이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광주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민들의 저항 정신을 담아내는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다 1996년에 이르러 ‘5·18민주화운동’이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의 사용과 그로 인한 논쟁적 상황은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는 미래의 역사 교원으로서 이러한 복잡하고 민감한 명칭 논쟁의 흐름과 그 이면에 담긴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습자들에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함양시키는 것은 교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4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5·18 명칭의 시기별 변천 과정을 분석하여, 5·18의 공식 명칭 변화와 함께 교과서 서술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히 살펴

1)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2) 신영국, 「5·18민주화운동 왜곡 방지를 위한 언어철학적 접근 -명칭에 대한 갈등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9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5

3) 양호환, 「歷史教科書의 敘述樣式과 學生의 歷史理解」, 『歷史教育 第55輯』, 1996

보고자 한다. 이어, 명칭을 둘러싼 주요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위 분석을 바탕으로 5·18의 본질과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올바른 명명’에 대해 예비 역사 교원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5·18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명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1) 4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서 5·18의 명칭과 서술 내용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2) 1980년부터 현재까지 5·18의 명칭을 둘러싼 주요 논쟁엔 무엇이 있는가?
- (3) 5·18의 본질과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올바른 명명’은 무엇인가?

나) 연구 방법

- (1) 4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까지 발행된 한국사 교과서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명칭의 변천과 서술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 (2) 교과서 외부에서 명칭 변화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학술 연구 논문 등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Ⅱ. 교과서 속 5·18민주화운동: 명칭과 서술 내용의 변천

역사 교과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특정한 서술 양식과 관점에 따라 구성되며, 그 내용은 학습자들이 접하는 공식적인 역사로 간주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다.⁴⁾ 교과서 속 5·18의 명칭과 서술의 변화는 사건에 대한 시기별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4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까지 한국사 교과서에서 5·18이 어떻게 명명되고 서술되었는지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시기별 특징과 변화의 맥락을 규명하고자 한다.

4) 양호환, 「歷史教科書의 敘述樣式과 學生의 歷史理解」, 『歷史教育 第55輯』, 1996

1. 초기 교과서 명칭과 서술의 변천: 5·18 발생 초기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은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신군부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역사 교과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광주사태’ 혹은 ‘무장폭동’ 등으로 불리며 그 본질과 의미가 축소되거나 부정되었다. 심지어 교과서에서는 아예 5·18을 언급하지 않거나,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처리하여 학습자들이 사건의 전체적 맥락과 역사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사건 발생 직후, 4차 교육과정(1982)에 담긴 5·18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10·26 사태를 맞았다. 그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⁵⁾

위에 언급된 ‘이러한 혼란’은 5·18을 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18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등장하지 않으나, 당시 정부의 시각이 반영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를 언급한 점에서 당시 정권의 진압을 정당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4차 교육과정기 근현대사 교육의 실제 내용은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가 역사 발전의 주체라는 민족사관 입장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반공체제와 독재체제의 정당성만 강화시키고자 하였다.⁶⁾ 이러한 서술은 학습자에게 5·18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고 6월 항쟁(1987)을 통해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5·18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5차 교육과정(1989)부터 반영되었다.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26 사태 이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12·12 사태가 일어났다. 이를 전후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탄압과 여러 부정 사건 및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⁷⁾

5) 4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175pg

6) 차미희, 「중등 국사교육의 변천에 대한 연구: 국사과 독립 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교과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위를 보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5·18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밑줄 친 부분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는 서술은 학습자들이 5·18을 각계각층의 시위가 아닌 학생들의 시위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등장한 6차 교육과정(1992)의 서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때 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압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되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6차 교육과정도 동일하게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5차 교육과정과 달리 서술 내용이 사건의 민주화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언급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계엄군'이 아닌 '진압군'이라 표현을 사용하였고, 진압군은 소요, 폭동, 반란 따위를 진압하는 군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⁸⁾ 이는 아직 5·18에 대한 법적·사회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았던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6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는 5·18을 언급하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으며, 진실 규명보다는 사건의 발생 자체를 기술하는 데 머물렀다.

2. 공식 명칭 확립 이후 교과서 서술의 심화와 안정: 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김영삼 정부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명칭으로 확립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5·18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전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국가적 기념일로 승화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명칭의 변화는 사건의 보편성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5·18에 대한 교과서 서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공식 명칭이 적용된 7차 교육과정의 내용부터 살펴보겠다.

7)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183pg

8) 이연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고교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학생의 인식」, 『인문학술 5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0

국민은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12·12사태로 군사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도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기도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에 시민군이 결성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이 희생되었다.⁹⁾

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5·18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교과서처럼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었다는 패배주의적 입장의 서술이 아니라,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식의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¹⁰⁾ 또 보충 설명란이 추가되었으며, '진압군'이 아닌 '계엄군'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과거의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요구와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숭고한 희생을 서술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 5·18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고 교과서에까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이후의 교과서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서술의 안정화 및 심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 교과서들은 단순히 5·18의 발생과 진압 과정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공식 명칭 정립 이후 교과서 서술의 심화는 단순히 양적인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사진, 그림, 사료 등 다양한 시각 자료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사건에 대한 생생함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결론적으로, 5·18의 교과서 명칭 및 서술은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초기에 부정적이거나 모호했던 명칭과 간략한 서술은 법적·사회적 합의를 거쳐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교과서 내용 또한 사건의 본질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심화하며 안정화되었다. 이는 교과서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가치와 인식을 반영하고,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일

9)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27pg

10) 이연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고교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학생의 인식」, 『인문학술 5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0

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Ⅲ. 명칭을 둘러싼 주요 논쟁과 그 의미

5·18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년)과 이후 정부의 공식 인정(1996년)을 통해 그 명칭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공식 명칭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 용어들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였고, 이는 5·18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들을 제공한다. 이 논쟁들은 역사 사건의 명칭이 단순한 지시어의 선택이라는 문제를 넘어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정의하고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¹¹⁾ 본 장에서는 5·18의 명칭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들, 즉 '운동'과 '항쟁' 용어의 선택과 '민중' 용어 사용, 그리고 '광주' 명칭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각 쟁점의 역사적 맥락과 이념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운동'과 '항쟁'

5·18의 명칭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이고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운동(運動)'과 '항쟁(抗爭)'이라는 용어의 선택 문제이다. 두 용어 모두 억압에 저항하는 집단적 행동을 의미하지만, 그 함의하는 바는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운동(運動)'¹²⁾은 비교적 조직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활동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은 주로 제도 개혁이나 법적 투쟁 등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틀 안의 노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사건을 한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정당한 역사적 과정으로 포섭하려는 의지를 담는다. 이는 5·18의 폭력성을 부각하기보다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인권 회복을 추구한 운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통합하는 데 더 용이한 표현으로 작용했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은 사건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적, 사회적 인정

11) 신영국, 「5·18민주화운동 왜곡 방지를 위한 언어철학적 접근 -명칭에 대한 갈등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9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5

12) 사회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조직적인 활동

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5.18을 과거의 부정적 낙인인 '사태'나 '폭동'으로부터 벗어나,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의 채택 과정에는 이러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특히 노태우 정권 당시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한 것은, '의거'나 '항쟁'으로 규정될 경우, 군의 진압 책임이 직접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야당은 '항쟁'이나 '투쟁'을 주장했으나, 결국 여당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이를 두고 노태우 정부와 당시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과거를 은폐하고 사건의 프레임을 '민주화운동'으로 선택하여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비판적 평가도 존재한다.

반면, '항쟁(抗爭)'¹³⁾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에 맞서 무장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을 벌였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독립 항쟁', '무장 항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저항, 경우에 따라선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투쟁적 성격을 강하게 부각한다. 5·18의 현장에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 시민들이 자위적 차원에서 무장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민주화 운동가나 급진적 성향의 연구자들,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5·18을 '광주민중항쟁'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했다. '항쟁'이라는 명칭은 당시 신군부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숭고한 희생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으로 여겨졌다. 이는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강조하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항쟁'은 5·18을 단순히 제도권 내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로 보는 것을 넘어, 민중의 직접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 변혁을 추구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데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쟁은 5·18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지만, '항쟁'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5·18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는 사건의 비폭력적 민주화 운동적 측면과 동시에, 국가 폭력에 맞선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라는 이중적 본질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13) 맞서 싸움

다. 교과서에서 ‘운동’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으로써 자칫 5·18이 지닌 격렬한 저항과 희생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며, 이는 교원들이 학습자들을 교육할 때 단순히 공식 명칭만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다층적인 면모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2. ‘민중’ 용어 사용

5.18의 명칭을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사건의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특히 ‘민중(民衆)’이라는 용어 사용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존재했다. ‘민중’은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시민’과 유사하게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이 용어는 특정한 역사적, 이념적 맥락을 내포하고 사용되었다.

‘민중(民衆)’¹⁴⁾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國民)’이나, 비교적 중산층 이상의 도시 거주자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는 ‘시민(市民)’과는 달리, 사회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즉, ‘민중’이라는 표현은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 기존의 체제에 의해 억압받고 희생당했던 사람들, 주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대다수 대중을 강조하는 용어였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자발적으로 들고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사망자와 참여자의 계층을 분석한 결과 노동자, 농민, 영세인 등 기층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민중’이라는 용어는 5·18의 주체적 성격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이었다.¹⁵⁾ 이에 따라 운동권과 진보적 학계에서는 5·18을 ‘광주민중항쟁’이라 명명하며, 사건의 주체가 특정 엘리트나 계층이 아닌 일반 민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의 자발성과 대중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는 5·18이 단순한 시위나 폭동이 아니라, 민중의 자기 해방적 의지가 표출된 변혁적 사건임을 주장하는 이념적 지향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민중’이라는 용어가 지닌 특정한 이념적 색채 때문에 공식 명칭에서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민중’이라는 용어가 계급 투쟁론과 연결되거나, 과격한 이미지, 또는 사회주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민중’ 대신 ‘국민’이나 ‘시민’과 같이 보다 보편적이고 이념 중립적인

14)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른다.

15) 최영태, 「5·18항쟁의 명칭문제: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용어를 선호했다. ‘국민’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며 국가 정체성과 통합을 강조하는 반면, ‘시민’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한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에서 ‘민중’이라는 용어가 배제된 것은 5.18을 특정 계층의 투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민주주의 염원을 담은 사건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합의 과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5·18의 역사적 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5·18이 한국 현대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민중’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사건의 저항적이고 변혁적인 성격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또는 ‘시민’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통해 사건의 보편적 민주주의적 의미를 강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5·18의 역사적 해석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점을 형성한다. 교원들은 이러한 용어 선택의 배경과 함의를 이해하고 학습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5.18의 다면적인 주체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3. ‘광주’ 지역명 포함

5·18의 명칭 변천 과정에서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명인 ‘광주’를 명칭에 포함할 것인가, 혹은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초기에는 5·18을 폄훼하고 특정 지역의 국한된 사건으로 격하하려는 의도에서 ‘광주 사태’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는 5·18을 지역적 갈등이나 고립된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으며,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맞서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측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 등 ‘광주’를 포함하되 ‘민주화운동’ 또는 ‘항쟁’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명칭을 사용했다. 이 시기 ‘광주’라는 명칭은 사건의 지리적 발생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선 민주화의 성지, 희생과 저항의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했다. ‘광주’라는 명칭을 통해 시민들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들의 고립된 싸움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1996년 ‘5·18민주화운동’이 공식 명칭으로 확립되면서 ‘광주’라는 지리적 명

칭이 배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장 큰 이유는 5·18의 전국화 도모였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호남의 고립이 노골화되었고, 호남 고립의 타개를 위해 '광주' 지역 명을 삭제하여 전국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광주 지역의 민주 세력은 5·18을 폄훼하려는 세력에 맞서 5·18의 진실을 전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양시키고자, '광주' 명칭을 배제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로 인해 '5·18'이라는 낱자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물론 '광주' 명칭이 배제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들은 '광주'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처절한 희생이 '광주'를 배제하므로 인해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5·18을 폄훼하는 세력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주' 명칭의 배제가 전국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지역성과 보편성, 특수성과 일반성이라는 역사 해석의 큰 틀에서 5·18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

I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교과서 속 5·18민주화운동 명칭의 변천과 이를 둘러싼 논쟁: 올바른 명명 제언'이라는 주제로, 교과서 속 5·18의 명칭 및 서술 내용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주요 논쟁을 고찰하였다.

Ⅱ장에서는 5·18에 대한 교과서 명칭과 서술 내용의 변천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4차~6차 교육과정 시기 5·18에 대한 서술이 점차 늘어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서술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법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이 확립되고, 이에 따라 교과서 서술 내용이 심화하고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변천 과정은 단순한 용어의 변화를

넘어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Ⅲ장에서는 5·18의 명칭을 둘러싼 주요 논쟁을 '운동'과 '항쟁', '민중' 용어 사용, 그리고 '광주'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각 논쟁은 5·18의 성격, 주체, 그리고 보편성 및 지역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념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운동'이 지닌 합법적, 제도적 지향과 '항쟁'이 내포한 저항적, 투쟁적 성격의 차이가 명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명칭 문제가 단순히 단어의 선택을 넘어 사건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5·18이라는 특정 역사적 사건의 명칭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고 계승하며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2.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5·18 명칭의 변천 과정을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둘러싼 복합적인 논쟁과 그 교육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역사 교과서가 시대의 역사 인식을 담아내는 중요한 그릇이며, 따라서 교과서에 사용되는 역사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5·18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은 해당 사건의 다층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도 높은 성찰을 제공하며, 예비 교원들에게는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교육할 역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과 가치를 가장 온전히 담아내고 학습자에게 역사적 진실을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5·18 광주항쟁'으로의 명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정립되어 교과서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이 명칭의 채택 과정과 내포된 의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여전히 필요하다.

'항쟁'이라는 용어는 5.18의 본질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낸다. '운동(運動)'이 '사회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주로 제도 개혁이나 비폭력적인 노력을 강조한다면, '항쟁(抗爭)'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에 맞서 무장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의 의미를 내포한다. 5.18은 단순히 평화적인 시위나 점진적인 개혁 요구를 넘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학살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자위

적 차원에서 무장까지 불사했던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당시 정치권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선택한 데에는 '항쟁'으로 규정될 경우 군의 진압 책임이 직접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고려할 때, '항쟁' 명명은 5.18이 가진 폭력적 진압과 이에 맞선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라는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보다 직관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끈질긴 저항과 숭고한 희생을 통해 쟁취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더욱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

'광주'라는 지리적 명칭의 포함은 사건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공식 명칭인 '5·18 민주화운동'에서 '광주'가 제외된 것은 사건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광주'라는 명칭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지리적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항한 시민들의 집단적 기억, 처절한 희생, 그리고 절박한 저항 정신이 집약된 상징적인 공간이다. '광주'의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공동체 정신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특별한 저항의 사례였다. 따라서 '5·18 광주항쟁'이라는 명칭은 사건의 보편적 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가치가 태동하고 발현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즉 '광주'라는 역사의 현장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는다. 이는 5.18이 전국적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보편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고립과 아픔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포괄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역사 교원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법적·공식적 명칭만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5·18 광주항쟁'이라는 용어가 지닌 역사적 진실과 이념적 함의를 학습자에게 함께 설명함으로써 사건의 다면적인 성격을 온전히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비록 공식적인 명칭 변경에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와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광주항쟁'이라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 진실성과 교육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역사적 사건의 명칭이 단순한 단어가 아닌, 시대의 아픔과 노력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깨닫고,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비판적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과서의 명칭과 서술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미래의 역사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명명을 향한 지속적인 학술적,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예비 역사 교원인 우리는 이러한 논쟁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학습자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며, 무엇보다 그 속에 담긴 '광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도록 돕는 책임 있는 역사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논문>

- 최영태, 「5·18항쟁의 명칭문제: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 양호환, 「歷史敎科書의 敍述樣式과 學生의 歷史理解」, 『歷史敎育 第55輯』, 역사교육연구회, 1996
- 신영국, 「5·18민주화운동 왜곡 방지를 위한 언어철학적 접근 -명칭에 대한 갈등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9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5
- 이연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고교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학생의 인식」, 『인문학술 5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0
- 차미희, 「중등 국사교육의 변천에 대한 연구: 국사과 독립 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교과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역대 국사 교과서 (4, 5, 6, 7차)
- 금성 출판사. 2009 개정 한국사 교과서
- 금성 출판사. 2015 개정 역사, 한국사 교과서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5·18기념재단
- 우리말샘

국가폭력과 테러리즘으로 바라본 여수·순천 10·19 사건

2025년 추계 답사 규장각 세미나
역사교육과 20230842 설수빈

차례

I. 서론	1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여순사건의 개요	2
1. 여순사건의 배경	
2. 여순사건의 발발과 진압	
III. 여순사건 속 범죄	5
1. 제14연대의 봉기는 테러인가	
2. 진압군의 학살은 국가폭력인가	
IV. 결론: 여순사건 너머의 우리	15

참고문헌

I. 서론

1. 문제제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던 와중 남로당 제주도당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며 봉기를 일으켰다. 토벌대를 진압하는 과정 등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건(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 명령을 내린 여수·순천의 군부대 내에서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을 반대하며 무장봉기를 일으킨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순사건은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의 갈등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 되어왔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기존 여순사건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2000년 이전까지는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반란’으로 규정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2000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김득중의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을 비롯하여 이념의 갈등과 정치사적 접근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2021년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순천대학교 10·19 연구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진상규명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정치사적 관점에서 이념의 갈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 중심의 해석은 당시 무장 세력과 정부 모두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를 윤리적, 법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범죄학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여순사건의 폭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범죄학의 이론을 여순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여순사건이 갖는 범죄적 특징과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여순사건을 테러리즘과 국가폭력을 통해 이해하고, 제14연대와 정부 진압군의 행위를 범죄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것이 갖는 특성과 여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여순사건 당시 발생한 국가폭력과 테러리즘 중 어떤 곳에 죄의 무게가 있을지 그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여순사건 발생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

나. 여순사건 당시 발생한 진압군의 학살을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 여순사건에서 제14연대의 봉기를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2) 연구방법

가.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여순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구조적으로 이해한다.

나. 여순사건을 국가폭력의 정의와 기능을 통해 살펴본다. 이후 이를 형법적 기준에 비추어 국가폭력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여순사건에서 발생한 진압군의 민간인 학살이

국가폭력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성찰한다.

다. 테러의 정의와 목적, 기능 등을 살펴보고, 여순사건의 제14연대 봉기에서 이러한 테러리즘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한다.

II. 여순사건의 개요

본 장에서는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통해 여순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사건의 흐름을 개괄하고, 무장 항쟁과 진압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여순사건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여순사건의 배경

1) 해방 직후 대한민국과 제주 4·3 사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후 한국은 기나긴 식민 통치를 마쳤지만, 곧바로 홀로 서지는 못하였다.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탄생하였다.

1945년 12월, 한국의 독립 문제를 두고 미국과 소련, 영국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를 통해 신탁 통치안을 결정하였다. 한반도는 이러한 신탁통치를 두고 좌우로 갈라지며 한국의 분열은 극대화되었다. 1946년 2월에는 북한이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수립하였고, 6월에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유엔에서도 곧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해방 직후 한반도의 좌우 분열과 선거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제주도에서는 좌파 세력인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이 등장하면서 제주도를 장악하였다.

남로당을 중심으로 뭉친 제주도민들은 미군정의 행보에 대해 큰 반발심을 가졌다. 그 와중 당시 높은 제주도의 실업률과 결정적으로 보리농사가 대흉작을 맞이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인민 위원회는 결국 미군정의 정책에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미군정은 도제 실시 이후 강화된 물리력을 바탕으로 인민 위원회를 탄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민은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3·1절 기념행사 중 사전에 시위를 예상하고 현장을 경비하던 기마경찰의 말에 한 어린아이가 치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를 공격으로 받아들인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미군에게 제주도는 빨갱이들의 섬이 되었고, 미군정과 경찰은 제주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갔다. 육지 경찰들과 극우 청년 단체인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로 파견되면서 관련자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민을 좌익 세력으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각종 폭력행위를 저지른다.

5·10 총선거를 통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제주도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군과 경찰은 우

익 청년단과 함께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이면서 약 2만 5천~3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2) 국방경비대 제14연대와 여수·순천 지역의 동향

국방경비대 제14연대는 1946년 2월 15일 광주에서 편성된 제4연대가 모체이다. 그중에는 여순사건의 주동자인 김지회와 홍순석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3기생으로 이 기수에는 좌파적 경향을 띠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후 제4연대 제1대대를 중심으로 1948년 5월 4일에 여수에서 제14연대가 창설되었고, 그 가운데 김지회와 홍순석과 같은 좌익 계열의 장교들 외에도 지창수 등 사건을 직접 주도하는 하사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창군 이전 국군은 경찰의 보조전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1947년부터 제14연대의 관할지인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서 군과 경간의 물리적 충돌이 세 차례나 발생하였지만, 모두 경찰에게 유리한 결과로 종결되었고, 이는 제14연대 병사들 사이에서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와 순천 지역은 해방 직후 우익 계열의 우세 속에서 좌우 간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에 들어서 단독선거 시행을 둘러싸고 우익과 좌익이 충돌하면서 여수와 순천은 혼란해졌고, 이러한 양측의 충돌은 유혈사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독 정부 수립이 확정되고, 남로당의 투쟁이 점차 급진·폭력화 되면서 이 지역의 단독 정부 반대 움직임은 대중적인 운동보다는 소수 인원에 의한 급진적 투쟁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2. 여순사건의 발발과 진압

1) 여순사건의 발발

위와 같은 배경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에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 출동을 준비 중이던 제14연대 내의 지창수, 김지회, 홍순석 등의 주도로 군인들의 출동 거부가 이루어졌다.

‘제주도 파병 반대’를 외치는 좌익 병사들의 선동에 다수의 제14연대 병사들이 호응하면서 곧 무기고를 점거하고 무장한 제14연대 군인들은 여수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한 뒤 여수를 장악하였다. 이후 제14연대 군인들은 순천으로 향하여 홍순석이 지휘하는 1개 중대와 합류해 순천의 각 지역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관과 청년단원 등 우익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좌익계 학생들과 교사들을 무장시켰고, 이 과정에서 순천의 일부 학생들이 가담하기도 하였다.

순천을 점령한 뒤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던 제14연대 반군 병력은 정부의 진압이 거세지자, 지리산과 백운산 등지로 들어가 빨치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 여순사건의 진압

제14연대가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자 정부와 주한미군은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정부는 ‘투항 아니면 총살’, 그리고 신속한 진압방침을 정한 채 막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압박 섬멸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후 여순사건에서 군경의 진압작전은 크게 두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여수·순천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켜 진압하는 단계이다. 정부는 여수-순천을 축으로 포위섬멸전을 전개하였다. 군은 10월 20일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한다.

10월 21일의 작전계획은 진압부대들이 이동해 여수-남원의 도로를 따라 반군을 고립시킨 뒤 진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 구상과는 달리 진압작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군이 가진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군은 이전까지 연대 간의 합동 훈련이나 작전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지휘계통이 통일되지 않은 채 혼란스러웠다. 또한 각각의 부대별로 통신수단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통신과 병참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10월 22일에는 하동에서 여수로 이동하던 제15연대가 광양을 넘어가던 도중 반군의 매복에 기습당해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고, 연대장과 사병들이 반군에 사로잡힌다. 또 이날 밤 경험이 부족한 보초병의 발포로 인해 진압군끼리의 전투가 발생하였다. 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에서 이동하여 여수 상륙을 시도하던 제5연대의 상륙작전은 제14연대 병력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고 많은 사상자를 낸 채 후퇴해야 했다.

이후 10월 25일 진압군은 장갑차와 박격포의 지원을 앞세워 다시 여수 진입작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10월 26일 진압군은 여수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10월 27일 여수를 완전히 점거하게 된다.

반군이 지리산과 백운산 등지로 들어가 저항하기 시작하자 진압군은 빨치산으로 들어간 제14연대를 토벌하기 위해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한다. 지리산 지역의 빨치산 토벌작전은 주로 제3연대와 제12연대가 전개하였다. 그러나, 빨치산의 주력이 지리산과 백운산 등지에서 나고 자란데 반해, 토벌작전을 전개한 군인들은 지리산과 백운산 지역이 처음인 외지 출신들이었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때문에 토벌작전 초기에는 쉽게 추격전을 전개하기가 어려웠지만, 지역 출신의 군인들이 토벌부대로 동원하면서 점차 극복되어 갔다.

군경의 계속되는 추격과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산악지대에 근거하던 빨치산의 식량과 보급은 점차 고갈되어 갔고, 11월 5일 기자회견에서 호남방면 사령관 원용덕 대령은 여순사건에 가담하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반역자로 규정하여 극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경고는 단순한 경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서 실행되고 있었고, 때문에 빨치산 중에서 이탈하거나 보급을 이유로 산 주변의 마을을 습격하여 쌀과 감자 등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잦아졌다.

3) 계속되는 학살

10월 27일 진압군이 여수를 점거하게 되면서 이들은 두 번째 단계의 계획을 펼친다. 지리산과 백운산에 들어간 빨치산을 진압하는 대비정규전과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각지에서 부역자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히나 부역자 처벌은 정식 재판 없이 즉결심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반란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저질러졌다.

한편, 정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범석 국무총리는 ‘좌우의 합작’에 의한 음모로 몰아가며 김구를 제거하려 했으나 김구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하자 남로당의 음모로 몰아갔다. 정부는 여순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전남북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로부터 시작된 민간인 학살은 그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여수와 순천에 진입한 군경은 가장 먼저 반군과 이에 가담한 협력자를 색출하고자 하였다. 진압군은 주민들을 소집하여 머리가 짧은지, 군용 팬티를 입었는지,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는지 등 외모를 기준으로 반군과 협력자를 색출하였다. 그리고 경찰, 우익인사, 청년단원 등 여순사건 직후 반군이 점령한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집단이 주민들 중 반군과 협력자라고 지목하여 색출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반군에 협력한 이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누가 ‘가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반군 협조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총’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진압군은 혐의가 뚜렷한 이들을 강압하여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 동조자를 손으로 가리키게 했는데, 이것이 ‘손가락 총’이었다. ‘손가락 총’은 실제 총과 같은 위력을 갖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반군 가담자를 심사하는 것은 주로 외모,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모략, 강요된 자백에 근거를 두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진압군에게 반군이나 좌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러 온 사람들조차 취조당하고 구타당하거나 사살되기도 하였다.

10월 말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진행된 군의 진압작전과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여수 도심권, 남면, 화양면 등지에서 많은 주민이 진압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 여수시 남면에서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김종원이 지휘하는 국군 제5연대 소속 군인들이 안도초등학교, 안도 선착장 등지에서 남면 주민들을 집단학살하였다. 특히 악명 높은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던 김종원은 사람들을 연행하여 고문한 뒤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는 등의 악행을 시작하였다. 그는 주민들을 분류해 재판도 없이 즉결처분하고, 일본도를 휘두르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다.

여순사건 직후 지역의 주민들은 “여순 때가 인공(6·25전쟁) 때보다 더했다.”고 말하곤 한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민간인 학살, 계엄령, 군의 역할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여순사건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도 분명하지 않다.

Ⅲ. 여순사건 속 범죄

본 장에서는 여순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범죄학의 이론을 통해 여순사건을 이해하고자 한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테러리즘과 국가폭력의 성격을 정의하고, 여순사건에서 나타났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제14연대의 봉기는 테러인가

1) 테러리즘(terrorism)

테러리즘이란 주권국가 또는 특정의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또는 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

테러조직들의 전략은 주로 정치적 선전, 공포분위기 확산, 심리전 효과, 동료의 석방, 자금의 조달 등이 있다. 대부분의 테러조직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널리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목표는 단순한 파괴보다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또한, 테러단체들은 폭력의 행사 결과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피해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결과에서 나타나는 공포심 유발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테러조직들은 성공과

실패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테러의 유형의 6가지 유형 중 여순사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유형은 ‘혁명형 테러리즘’ 정도일 것이다.

‘혁명형 테러리즘’은 지배 권력과 통치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부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폭력 수단을 통해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런 행위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현 정부의 비인도적 행위나 무능력 등을 노정하게 하여 정부를 전복시키는 기폭제로 테러를 활용한다. 일부의 경우는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졌거나,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이방인’으로 규정된 사람이나 단체를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2) 제14연대의 봉기는 테러인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주둔하던 제14연대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제주 4·3 사건 진압을 반대하면서 여순사건이 발발하였다. 이들은 여수 지역의 좌익 인사들과 함께 ‘제주도 파병 거부’를 선동하는 동시에 무기고를 점령하였고, 이후에는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며 항쟁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과 많은 우익 인사들을 살해했다. 경찰서장과 사찰계 직원 10명, 한민당 여수지부장, 대동청년단 여수지구위원장, 경찰서후원회장 등과 그 가족을 포함해 70여 명이 살해당했다. 순천에서는 홍순석의 지휘하에 순천을 장악하고, 살인, 약탈, 방화 등을 저지르게 된다.

제14연대는 봉기의 명분과 목적을 제주도 진압 반대와 경찰의 비행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의 행위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 자체는 ‘혁명형 테러리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우익 인사, 경찰관 및 그 가족들을 선별적으로 처형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끝내 ‘혁명형 테러리즘’의 핵심인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들의 항쟁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숙군 사업이 강화되는 등의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봉기 과정에서 제14연대의 일부 병사들은 군·경뿐 아니라,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민간인들까지 공격하였고, 이는 군사 반란의 차원을 넘어 무차별적인 폭력이자,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제14연대는 지역 주민들에게 협력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등의 폭력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중을 강제로 동원·통제하려는 테러의 성격을 띤다.

그런데 여기서 빨치산 투쟁을 테러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빨치산 투쟁은 제14연대의 봉기가 빨치산으로 들어가 지역의 공포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언뜻 테러와 비슷하지만, 빨치산 투쟁은 테러보다는 게릴라전에 가깝다. 실제로 테러리스트와 게릴라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해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게릴라는 테러리스트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게릴라는 ‘작은 전쟁(small war)’이라는 의미를 지닌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농촌이나 산촌 등의 은신처를 갖고 행동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군인, 정치인, 정부관료 등을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고 대부분 전형적인 군대조직의 형태를 취하면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규모의 전투를 벌인다.

즉, 빨치산 투쟁은 지리산과 백운산 등지에서 정부군을 대상으로 소규모 전투와 추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테러보다는 게릴라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14연대의 테러는 역사 속에서 테러와 봉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테러

를 교훈 삼아 현대에서도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진압군의 학살은 국가폭력인가

1) 국가폭력

정치폭력은 ‘공적 영역에서 특정한 사회적·종족적·경제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를 포함한 정치 집단이 명시적·암묵적으로 행하는 강제, 강제하고자 하는 위협, 신체적 위해 등의 직간접적 폭력’을 말한다. 국가폭력을 이러한 정치폭력의 한 형태로 보면 정치폭력 중에서도 ‘각종 차별과 불평등 관계를 창출·정당화·강화·변명하기 위해 시도하며, 국가가 묵인하거나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세계 각처에서 경제적·정치적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광범위한 규모의 학살과 죽음 및 가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과 사회 범죄, 대규모의 정치적 난민 발생 등도 국가폭력이라 테러, 더 나아가 집단학살(genocide)¹⁾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자행되는 국가폭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고통을 주어 국가권력에 순응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본질에는 처벌받아야 할 사회적 범주를 창출하고 사회적 범주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특정한 행위 규범을 강요하고 순응하도록 만들며, 특정한 집단을 정당화하거나 무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기획이 숨어 있다. 그래서 국가폭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때로 사회적·정치적·심리적 고립 상태에 빠지거나 견딜 수 없어 자해하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국가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별 짓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2) 진압군의 학살은 국가폭력인가

여순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제14연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승만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정치 이념이 다른 자들을 제거하고, 낙인찍어 사회적 공포를 심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순사건을 국가폭력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국가는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존재한다. 그러나 여순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은 ‘내부의 적’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하였고, 이는 정당방위나 치안 유지와 같은 합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 폭력이었다.

당시 진압군은 여수·순천 일대에서 머리모양, 복장, 손의 흔적 등 외모를 기준으로 반군과 협력자를 색출하고자 하였고, ‘손가락 총’이라는 고발 방식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는 무시된 채 대부분 즉결심판으로 처분되었다. 이는 명백히 국가권력의 자의적 폭력이자,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진압군은 단순히 사건에 직접 가담한 군인이나 세력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빨갱이’로 낙인찍고 대규모 학살을 벌였다. 이는 이념적·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수단으로 폭력이 활용된 것이므로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행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순사건과 같은 국가폭력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까

1) 집단학살(genocide) :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제거하는 것

지 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은 물리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낙인과 기억의 왜곡, 제도적 침묵 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국가폭력은 그 유형의 특성상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여순사건 너머의 우리

본 연구는 여순사건을 범죄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여순사건에서 발생한 봉기는 테러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중 혁명형 테러리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에 의한 폭력도 범죄학적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폭력이 갖고 있는 그 피해 규모와 여파에 집중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순사건을 통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테러에서 나타나듯 여순사건은 많은 피해와 당시의 혼란한 시대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수많은 과제에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테러리즘과 국가폭력 중 무엇이 더 중대한 범죄인가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어 여순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역사학과 범죄학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범죄학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과거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 그 여파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역사 속 폭력을 명확히 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 또,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현대 범죄예방과 대응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더 잘 이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순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구체적인 방안이 고안되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 외 7명, 「시민과 함께 읽는 여순사건」, 선인, 2023
- 전대양, 「범죄학 기초·유형·이론」, 다해, 2017
-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5판」, 학지사, 2024(1쇄 2010)
- 김창윤, 「경찰학 총론 2판」, 박영사, 2025(1쇄 2023)
- 노영기. "여순사건과 국가폭력의 구조." 역사학연구 75.- (2019): 215-242.
- 유혜량. "'여수-순천 10-19사건'에 나타난 국가 폭력성과 민간인 희생의 재조명 : 故 김생옥 선생에 대한 '기억투쟁'을 중심으로." 인문학술 10.- (2023): 129-165.
- "국가폭력 연구의 최근 경향과 새로운 연구 방향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7.1 (2007): 5-28, 369-370.
- 정해구(서평자). "여순사건과 역사의 진실." 사학연구 -.95 (2009): 225-236.
- 문동규.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폭력과 죽음으로서의 여순사건." 감성연구 0.21 (2020): 5-28.

한산·명량대첩에 적용된 전술에 대한 비교·분석

20250416 이상철

목차

1. 머리말
2. 한산대첩의 전술과 특성
3. 명량대첩의 전술과 특성
4. 한산·명량대첩의 전술에 대한 비교 검토
5.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해전의 승리는 전쟁 전체의 전세 역전의 변곡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군사력과 전술상 우세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이에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 수군 진영이 어떠한 전술을 기획·활용하였는지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술(戰術, tactic)은 단기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전쟁에서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 전략(strategy)인 반면에 전술은 적의 병력을 격멸함으로써 전략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소논문 작성의 궁극적 목표는 한산대첩과 명량대첩에서의 조선 수군 승리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고자 연구자는 두 대첩에 적용한 각각의 전술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첫째, 두 대첩에 적용된 전술들의 형태 파악하려 한다. 두 대첩에서는 다양한 전술들과 각 상황에 맞는 전술들이 활용되었다. 상황별로 어떤 전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적용된 전술의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이다. 한산대첩과 명량대첩은 각각 다른 조건의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력 동원과 활용에 있어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두 대첩의 전술들을 비교 분석한 후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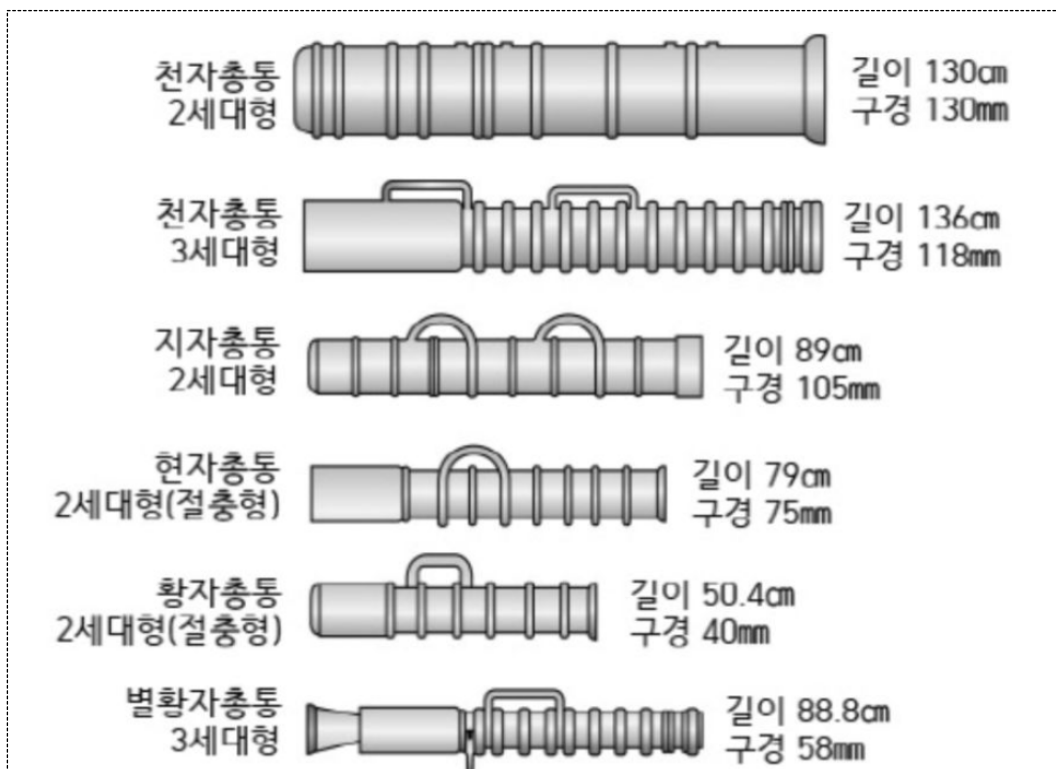
위와 같은 연구 방법과 내용을 통해 한산대첩과 명량대첩에 적용된 각각의 전술

적 요소의 특성, 그리고 명랑대첩에 적용된 전술적 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선 수군 승리의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한산대첩의 전술과 특성

한산대첩에서 사용된 여러 무기체계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포이다. 화포는 화약을 이용하여 포를 날려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조선 시대에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화포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천·지·현·황자 총통이 있다.

천자총통은 장거리 포격이나 대형 함선 공격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잘 활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일본 수군의 함선 분포는 세키부네라는 소형선 때문이다. 천자총통을 사용하게 되면 장거리 포격에는 명중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무게가 많이 나가 제약이 걸려 전투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소형선 이기에 탄환들이 회피 될 것이기에 잘 활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사용된 조선의 화포들(출처:bbs.ruliweb.com 2024.12.21.)

그다음으로, 지자·현자 총통이 있는데, 주로 사용된 화포였다. 이는 중거리 단거리에 초점이 맞춘 화포로써, 일본 수군과 전투하기에 가장 특화된 무기였다, 그 근거는 일본 수군의 전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수군은 등선백병전에 특화되어 있었다. 이 백병전은 상대와 근거리로 붙어 직접 전투하는 방식이었고, 그렇기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며 지자·현자 총통을 사용하여 일본 수군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확도 부분에서도 성능이 뛰어났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화포는 한산대첩뿐만이 아닌, 모든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의 해전에서 골고루 활용되며 전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무기였다. 더군다나 당시 전투에 투입된 배는 목선(木船)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철선이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적 군의 함선을 요격하면 불에 휩싸여 가라앉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전장에서의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일본 군이 사용하던 석화시(石火矢)라는 화포와 비교하면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압도적이었기에 화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조선 수군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전술들이다. 이순신 장군은 적들의 동태나 약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전술들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는 선제공격과 유인 전술이다. 선제공격은 상대편을 견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고, 유인은 주의나 흥미를 유발해 끌어 이끈다는 뜻이 있다. 유인 전술은 이순신 장군의 고유 전술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수군이 부대 편성을 지휘관 위주로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먼저 대장선이나 지휘선 공격을 감행하여 기선을 제압하고, 분위기를 아군 방향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였다. 실제 한산대첩은 아니지만 당포 해전에서 선제공격 전술을 활용하여 일본 장수의 머리를 베었다는 기록도 존재하고, 당포 해전에서도 거북선을 활용하여 화포를 발사해 적선을 깨트리고 적장이 화살에 맞아 바다에 떨어졌다는 기록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이 방법은 상대 수군이 적장을 잃게 되어 우왕좌왕하게 되고 적선들을 격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드시 대장선의 공격뿐만이 아니라도 적들에게 선제공격하여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는 유인 전술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한산대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이 견내량에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그곳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험준하기도 하고 배를 운행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기에 한산 앞바다로 일본 수군들을 끌어내 싸우려고 하였다. 판옥선 5~6척을 활용하여 조선 수군이 소규모로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어 방심하게 하고 한산 앞바다까지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는 먼저 적군의 본진을 먼저 타격한 선제공격이고 한산 앞바다로 끌어온 유인 전술이 함께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당파 전술이 있다. 당파 전술이란 배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여 파괴하거나 화포를 이용하여 적선을 파괴하는 전술이다.

이순신 장군은 이를 거북선으로 십분 활용하였는데, 거북선을 만든 연유에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조선 수군의 주력 선인 판옥선도 충분히 일본 수군의 함선보다 크고 단단하였지만,¹⁾ 상부 구조가 개방된 형태였기에 위험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거북선은 상부 구조를 덮어 안정성을 더하였고, 혹시 모를 백병전에 대비하여 상부 구조에 송곳이나 철제를 더하므로 방어에 한층 더 유리하였다. 그렇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 함대에 돌격할 수 있었고 빠른 속도로 다가가며 화포를 발사하였기 때문에, 상대의 진영을 붕괴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한산대첩에서 실행되었던 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조선 수군이 한산 앞바다로 유인하여 끌고 나왔을 때, 학익진 전술로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 포위한 전술 속에서 일본 함선을 향해서 화포를 발사하여 적선을 파괴했다. 또한 거북선으로도 적선을 향해 돌격하면서 근거리에서 화포를 발사하며 적의 진영을 붕괴시켰고, 많은 배 또한 당파(撞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²⁾

마지막으로는 전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산대첩을 유리한 상황에서 싸우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학익진 전법의 전개이다. 학익진 전법은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명명된 전술 체계이다.³⁾ 한산대첩에서 적들을 견내량 지역에서 한산 앞바다로 끌고 나온 후,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 판옥선과 거북선을 활용하여 학익진 전술을 펼쳤다. 측면에는 판옥선을 배치하였는데, 이 근거는 판옥선이 기동성과 방향 전환 관점에서 효과적이었기에 측면에 배치하여 더욱 빠르게 전술을 전개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본 함선을 유인하여 끌고 온 바다에서 이미 한산 앞바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조선 수군들이 학익진을 펼쳐 가운데로 가두고 집중 공격을 하였다. 일본 수군은 이미 유인을 당한 상황이고 일전에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본 수군은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전방에서는 거북선이 돌격하고 측면에서는 판옥선이 화포로 무자비하게 공격하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 일본의 세키부네는 삼나무나 전나무를 사용하여 가볍게 만들었고 조선의 판옥선은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내구성이 더 뛰어났다.

2) 諸章明, 「李舜臣의 水軍戰略과 閑山大捷」, 『군사』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101~133 참조

3) 이순신 장군이 만든 전술이 아닌 이전부터 만들어진 전술로써, 적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데에 특화되어있던 전술이다.



작성: 이상철(역교 25)

살펴본 것처럼, 한산대첩에서 사용된 전술들의 특성은 적들을 포위하고 화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것이었다. 지자·현자 총통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포격하였고 일본군의 백병전을 막았다. 더욱이 화포를 통한 당파 전술을 이용해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또한 유인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리한 진영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형을 이용한 전법을 활용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을 물리치고 학익진 전법을 활용해서 수군을 한가운데로 몰아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전세를 역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 명량대첩의 전술과 특성

명량대첩은 한산대첩과 다르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치렀다. 직전의 전투인 칠천량 해전의 대패로 인한 전력 손실이 컸으며, 또한 대패로 인한 조선 수군의 사기 저하도 대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전술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유인 전술이 있다. 한산대첩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이 유인 전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대에 전술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고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둔 전술이었다. 명량대첩에서는 지형을 활용하여 유인하였다. 당시 해상권은 조선 수군에서 일

본 수군으로 넘어가 있었다. 칠천량 해전의 패인 때문이었고, 장악한 해상권을 통해서 한양까지 진격하여 육군과 합류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를 이순신 장군은 간파하고 있었고, 일본 수군을 전남 방향에서 서해로 가장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상당한 위험이 존재했던 명량해협으로 유인하고자 했다.

일본 수군 또한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감행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직전 전투에서 승리로 인한 기세, 더욱이 전략이 급감한 조선 수군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판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순신의 유인 전술은 성공적이었다. 13척의 배로 상대해야 했던 상당히 불리했던 상황을 단숨에 대등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근소하게 만들었다. 근소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해협이라는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폭이 좁고 조류가 수시로 바뀌는 온전하지 않았던 길목이었다. 울돌목이라고도 불리었으며, 약 시속 10~12노트(대략 18.5~22.5 km/h)로 매우 빠른 유속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300척이 넘는 일본 수군의 전대가 일제히 들어올 수 없었고 더욱이 일본의 대형 함선인 아타케부네가 진격하기 힘들고 소형선인 세키부네 부대만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다. 총 300척이 넘었던 함선들이 130여 척으로 줄어들었고, 이 또한 한 번에 통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⁴⁾

이에 더해 명량해협의 유속을 알고 있고 유인을 통한 미리 전열을 갖추고 있던 조선 수군은 상대보다 전투를 치르기에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산대첩과 의도가 조금은 다른 유인 전술이었지만, 성공을 거둔 전술이었다.

다음으로는, 무형의 전술들이다. 가령, 사기 회복이나 전술 지휘 방법, 지휘관으로서의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이순신은 명량대첩에 복귀하기까지 상황이 순탄치 않았다. 모종의 이유로 정계에서 모함을 받고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실직을 당하며 옥살이 후 백의종군하고,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원군을 대신해 다시 복직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복귀하게 되었을 때 수군의 전장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에 이순신은 가장 먼저 사기 회복과 진영의 재정비를 우선으로 두었을 것이다. 먼저 수군의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던 조정에 답서를 보냈다.

저 임진년으로부터 5, 6년 동안에 적이 감히 충청·전라를 바로 찌르지 못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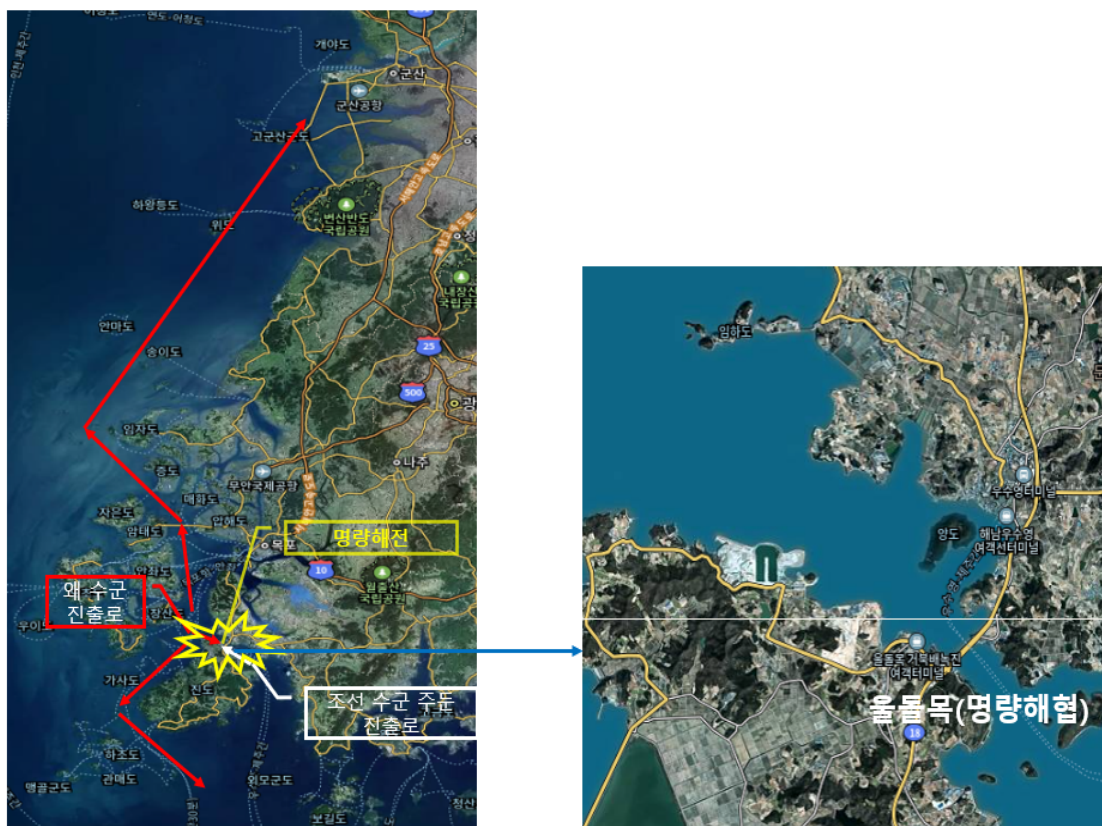
4) 노기욱. 『이순신의 수군 정비와 명량해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2013).

『亂中日記』 정유년 9월 16일

강석구, 이광수, 박진순, 염기대, 김은진, 정경태, & 이상룡. 『울돌목조석조류특성』. 「한국해양학회-창조과학과 해양과학의 미래」, 20-20 (2013).

은 우리 수군이 그 길목을 누르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이제 신에게는 전선이 12척이 있는 바 죽을 힘을 내어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만일 수군을 전폐한다는 것은 적이 만 번 다행으로 여기는 일일뿐더러 충청도를 거쳐한강까지 갈 것이라 그것이 신의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전선은 비록 적지만은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⁵⁾

비록 적은 전력이지만 수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흔들렸던 수군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고, 전선과 보급선을 수습하여 수군 정비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명량대첩 때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배치 현황과 진출로(작성자:이상철 역교 25)

이처럼 수군들은 기존에 전투를 승리로만 이끌어왔던 이순신의 복직과 수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을 하였기에, 일전에 억눌렸던 사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을 것이고 전투를 위한 재정비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순신은 명량대첩을 앞두고 있을 때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병법에 '반드

5) 『李忠武公全書』 권 9, 부록1 李芬 撰 「行錄」 “公啓曰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今臣戰船 尙有十二出 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 以爲幸而由湖右達於漢水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고 했으며,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이라도 두렵게 한다'고 했음은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살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조금이라도 너그럽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⁶⁾라고 말하며 전투를 앞둔 수군의 정신을 다잡는 모습들도 보여주었다.

이순신은 싸움과 전략에만 능한 것이 아닌 아군의 사기 진작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던 지휘관이었다.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전술들은 아니지만 전장에서 심리적인 요인은 승패를 좌우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하나의 전술로 봐도 무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화포의 활용과 당파 전술 또한 있었다. 울돌목의 좁은 지형으로 일본군을 유인한 조선 수군은 좁은 해협에 많은 수의 배가 들어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미리 진형을 갖춰 놓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렇기에 해협의 유속을 이용하여 거리를 화포 발사 시에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며 싸움을 속행하였다. 일본 수군은 빠른 해협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화된 전술인 백병전을 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유지해 전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또한 화포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와 공격을 지속적으로 당하며 손해가 누적되었고, 결국에는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300여 척이 넘는 대규모의 전대가 13척의 아주 적은 조선 수군에게 패배하던 순간이었다.

명량대첩에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불리했던 상황들을 극복하였으며,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의 정신적인 지휘력 또한 승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한산·명량대첩의 전술에 대한 비교 검토

한산·명량대첩에서 사용된 전술들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했다. 가령, 유인 전술을 살펴보자면 한산대첩에서는 견내량이라는 좁고 아군 판옥선이 부딪쳐 전투에 불리하게 작용할 뻔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한산 앞바다로 끌어냄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이후 학익진 전술과 당파 전술로 큰 손실 없이 다수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반면 명량대첩의 경우에는 전력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전면으로 붙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형이 불편한 전장까지 끌고 와 전투를 진행하였다. 빠른 유속을 활용해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산대첩과

6) 『亂中日記』 정유년 9월 15일

명량대첩에서의 상황은 정반대였지만 사용했던 전술은 동일하였고, 두 대첩 모두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한산 명량대첩을 비교했을 때 전술적인 의미가 더 컸던 것은 명량대첩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한산대첩 또한 전술적인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명량대첩은 전선 수군에 불리한 복합적인 요소와 전투 전 조선 수군 상황, 즉 전력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전술 전개에 상당한 고초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한 것은 지휘관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적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명량대첩 전의 상황은 당대 조선의 핵심 함선인 거북선의 부재도 존재했을 뿐 아니라, 잔존 병력을 수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량대첩에서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형과 지물, 해류의 흐름, 조수 간만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를 통한 공간적, 시간적 대응의 적기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산대첩의 전술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명량대첩만의 전술적 특성은 해류의 흐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유·불리한 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두 해전에서는 공통으로 사용된 전술이 있는데 먼저, 화포의 적극적인 사용이다. 이는 일본 수군이 특화 되어있던 백병전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였으며, 정확성 부분에서도 적 수군이 사용하였던 석화시(石火矢)보다 좋았고 화력 또한 압도적이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효과 또한 매우 뛰어나 큰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즉 판옥선 운영에 있어서 대형보다는 중·소형 화포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일본 수군의 옥선(세키부네, 아타케부네)에는 화포의 장착이 불가했던 반면, 판옥선에는 화포를 함선에 사용할 수 있었다.

둘째, 유인과 당파 전술의 활용이다. 모든 전술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단순히 적을 끌어들이는 개념에서 더 확장하여 당시의 상황, 전력의 차이, 지형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사용되었다. 전황을 바꾸는 요소가 되었고, 중요한 전술 중의 하나였다.

셋째, 이순신과 조선의 수군 뛰어난 전술 활용 역량이다. 이순신은 빠른 시일 내에 흩어진 수군 장병과 전함을 모아 전투가 가능한 수준의 선단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칠천량해전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던 부하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노력하였으며, 실제 전장에서는 항상 최선봉에서 일본 수군과 싸움으로써 숭선 수범하였다. 또한 명량의 지형지물과 조류에 주목하여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군

을 상대하기에 적합한 전략적 요충지를 전장으로 선택하고, 이에 맞는 전술을 수립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명량대첩의 전술이 한산대첩과 다른 점은 지형과 지물, 해류의 흐름, 조수 간만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를 통한 공간적, 시간적 대응의 적기를 잘 활용한 점이다. 즉 명량대첩만의 전술적 특성은 해류의 흐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유·불리한 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일본 수군이 서해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 휘하 조선 수군은 북쪽으로 고군산도(古群山島)까지 북상하면서 물자와 인력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 수군은 해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뒤인데다가 겨울이 다가와 서해안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져, 일본 수군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웅천까지 철수하였다.

[참고문헌]

『李忠武公全書』

『亂中日記』

『朝鮮王朝實錄』

제장명, 「李舜臣의 水軍戰略과 閑山大捷」, 『군사』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정완희, 민승식,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의 유형 전투력 분석』, 『군사』, 91 2014.

송기중, 『조선 시대 거북선의 배치와 운영』, 해양역사문화, 9 2022

홍순재, 『조선 시대 수군 주력 전선 ‘판옥선’ 구조의 이해』, 『군사』, 135(0) (2025).

제장명, 『정유 재란기 칠천량해전의 주요쟁점과 승리요인 재검토』, 동방학지, 144(0), (2008).

조인희, 『한산도대첩과 일본 수군』, 『해양역사문화』, 12 (2024).

이원희,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패인 분석』, 군사연구, 권 139호 (139), (2015)

노기욱, 『이순신의 수군 정비와 명량해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2013).